



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 토 보 고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목 차

I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1. 총수입·총지출	1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
3. 재원배분	6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0
II . 2026년도 예산안 총평	11
III . 재정총량 검토	15
1. 총수입	15
2. 총지출	21
3. 재정건전성	25

Ⅳ. 주요 정책 검토	29
1. 인공지능(AI) 전환 과제	31
2. 신산업·R&D 혁신 과제	34
3.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과제	37
4.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과제	40
5.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과제	42
6. 지방 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 생활환경 개선 과제	44
7. 저출생·고령화 대응 과제	46
8. 사회안전 기반 강화 과제	50
9.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과제	52
10. 산업재해 예방 과제	55
11. 재난예방·대응 과제	57
12.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과제	59
 [첨부] 부처별 예산 주요 분석내용(요약)	 61

I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2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6조원(3.5%)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세수입은 390.2조원이고, 세외수입은 37.4조원이며, 기금수입은 246.6조원입니다.

세입경정(△10.3조원)이 있었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은 18.1조원(4.9%)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0.2조원(△0.5%) 감소하며, 기금수입은 13.8조원(5.9%)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수입 구성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C)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증감 (D=C-A)	증감률 (D/A)	증감 (E=C-B)	증감률 (E/B)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31.8	5.0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18.1	4.9
세외수입	36.3	37.6	37.4	1.1	2.9	△0.2	△0.5
기금수입	232.8	232.8	246.6	13.7	5.9	13.8	5.9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국세수입의 경우 2025년 9월 재추계 결과 본예산 382.4조원 대비 12.5조원의 결손이 발생한 369.9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면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390.2조원은 전년 대비 20.3조원(5.5%)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전년대비		추경대비	
		예산(B)	2차 추경(C)	전망(D)	(D-A)	증감률	(D-C)	증감률
○ 총 국 세	336.5	382.4	372.1	369.9	33.4	9.9	△2.2	△0.6
- 일반회계	326.2	371.8	361.5	358.2	32.1	9.8	△3.2	△0.9
(소득세)	117.4	126.8	126.8	128.4	10.9	9.3	1.5	1.2
(법인세)	62.5	88.3	83.6	83.6	21.1	33.8	0.1	0.1
(부가세)	82.2	87.6	83.3	80.9	△1.3	△1.6	△2.4	△2.9
- 특별회계	10.4	10.6	10.6	11.7	1.3	13.0	1.1	10.1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7조원(8.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481.5조원, 기금은 246.5조원 규모입니다.

한편 2025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경우, 총지출은 제2회 추경 대비 24.7조원(3.5%), 예산은 14.2조원(3.0%), 기금은 10.6조원(4.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25~2026년도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예산안 (C)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증감 (D=C-A)	증감률 (D/A)	증감 (E=C-B)	증감률 (E/B)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24.7	3.5
○ 예 산	447.4	467.3	481.5	34.1	7.6	14.2	3.0
○ 기 금	225.9	235.9	246.5	20.6	9.1	10.6	4.5

주) 2022~2025년도는 본예산 기준. 2026년도는 예산안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8.1%는 2025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2.5%에 비해 대폭 상승하여, 2023~2025년 2.5~5.1%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2026년도 총지출 변동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본예산	제2회 추경	
□ 총지출 (증가율)	607.7 (8.9)	638.7 (5.1)	656.6 (2.8)	673.3 (2.5)	703.3 (7.1)	728.0 (8.1)
○ 예 산	413.0	441.1	438.3	447.4	467.3	481.5
○ 기 금	194.6	197.7	218.4	225.9	235.9	246.5

주) 2022~2025년도는 본예산 기준, 2026년도는 예산안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0\%$ 인 53.8조원 적자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p 악화된 수치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4.0\%$ 인 109.0조원 적자로 전망되며, 이는 본예산 대비 1.2%p 악화된 수치입니다.

다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3%p,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2%p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액 (B-A)
	본예산(A)	제2회 추경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21.7$ ($\Delta 0.8$)	$\Delta 60.8$ ($\Delta 2.3$)	$\Delta 53.8$ ($\Delta 2.0$)	$\Delta 32.1$ ($\Delta 1.1$)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73.9$ ($\Delta 2.8$)	$\Delta 111.6$ ($\Delta 4.2$)	$\Delta 109.0$ ($\Delta 4.0$)	$\Delta 35.1$ ($\Delta 1.2$)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Delta 2.8\%$ 를 기록하고, 이후 2026~2029년에는 $\Delta 4\%$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기 관리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예산	제2회 추경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73.9 (△2.8)	△111.6 (△4.2)	△109.0 (△4.0)	△115.4 (△4.1)	△128.9 (△4.4)	△124.9 (△4.1)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인 1,415.2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1.8조원(GDP 대비 3.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37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국고채가 1,276.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9.1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금의 경우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한 1.3조원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26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전년 대비 증감(B-A)
		예산(A)	제2회 추경	전망		
□ 국가채무(A+B) (GDP대비)	1,175.0 (46.0)	1,273.3 (48.1)	1,301.9 (49.1)	1,303.6 (49.1)	1,415.2 (51.6)	141.8 (3.5)
○ 중앙정부 채무(A)	1,141.2	1,238.7	1,267.2	1,267.2	1,378.5	139.8
■ 국 채	1,139.8	1,237.0	1,265.5	1,265.5	1,377.1	140.0
- 국고채	1,047.9	1,127.9	1,161.2	1,161.2	1,276.9	149.1
- 국민주택채	79.1	77.6	74.5	74.5	69.8	△7.8
- 외평채	12.8	31.5	29.9	29.9	30.4	△1.2
■ 차입금	1.2	1.5	1.6	1.6	1.3	△0.2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1	-
○ 지방정부 순채무(B)	33.9	34.7	34.7	36.4	36.7	2.0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3. 자원배분

2026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본예산 대비 20.4조원(8.2%) 증가한 269.1조원(37.0%)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어서 일반·지방행정분야 121.1조원, 교육분야 99.8조원, 국방 분야 66.3조원 순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R&D(19.3%, 5.7조원 증),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7%, 4.1조원 증), 일반·지방행정(9.4%, 10.4조원 증) 순으로 높고,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0.7조원(△9.1%)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전년 대비	
	본예산(A)		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B-A)	(B-A)/A
1. 보건·복지·고용	248.7	36.9	251.7	35.8	269.1	37.0	20.4	8.2
2. 교 육	98.5	14.6	96.2	13.7	99.8	13.7	1.4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	10.7	70.3	10.0	71.7	9.8	△0.6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26.2	3.9	25.9	3.7	28.2	3.9	2.0	7.5
3. 문화·체육·관광	8.8	1.3	8.9	1.3	9.6	1.3	0.8	8.8
4. 환 경	13.0	1.9	12.9	1.8	14.0	1.9	1.0	7.7
5. R&D	29.6	4.4	29.7	4.2	35.3	4.8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4.2	35.3	5.0	32.3	4.4	4.1	14.7
7. SOC	25.4	3.8	26.0	3.7	27.5	3.8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3.8	27.0	3.8	27.9	3.8	2.0	7.7
9. 국 방	61.2	9.1	61.3	8.7	66.3	9.1	5.0	8.2
10. 외교·통일	7.7	1.1	7.3	1.0	7.0	1.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3.7	25.8	3.7	27.2	3.7	2.2	8.8
12. 일반·지방행정	110.7	16.4	127.2	18.1	121.1	16.6	10.4	9.4
지방교부세	67.0	10.0	67.0	9.5	69.3	9.5	2.3	3.4
지방교부세 제외	43.6	6.5	60.1	8.5	51.7	7.1	8.1	18.6
합계	673.3	100.0	703.3	100.0	728.0	100.0	54.7	8.1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자원배분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이전이 250.0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 민간이전(157.0조원), 인건비(52.9조원), 융자금(45.5조원) 순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은 지분취득비(523.8%), 출자금(116.9%), 예비비및기타(63.4%), 정보보안비(53.0%) 순이고, 감소율이 높은 항목은 특수활동비(△67.0%), 건설보상비(△11.3%), 해외이전(△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는 전년 대비 656억원(△67.0%) 감액 편성되었으나, 과거 특수활동비목에서 분리된 안보비는 전년 대비 315억원(3.4%) 증액된 9,605억원이 편성되었고, 정보보안비는 전년 대비 842억원(53.0%) 증액된 2,4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성질별(목별) 규모]

(단위: 억원, %)

구분(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 총지출	6,733,016	7,032,531	7,280,059	547,044	8.1
○ 인건비(110목)	506,614	505,811	528,816	22,202	4.4
○ 물건비	312,244	313,812	320,265	8,022	2.6
- 운영비(210목)	256,612	257,491	256,515	△97	△0.0
- 여비(220목)	7,172	7,188	7,291	118	1.7
- 특수활동비(230목)	978	1,083	322	△656	△67.0
- 업무추진비(240목)	1,973	1,978	1,976	2	0.1
- 직무수행경비(250목)	10,315	10,867	10,859	545	5.3
- 연구용역비(260목)	24,315	24,327	31,267	6,952	28.6
- 안보비(270목)	9,290	9,290	9,605	315	3.4
- 정보보안비(280목)	1,588	1,588	2,430	842	53.0

(단위: 억원, %)

구분(목)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 이전지출	4,696,300	4,906,890	5,085,638	389,339	8.3
- 보전금(310목)	300,227	304,800	320,338	20,112	6.7
- 민간이전(320목)	1,448,860	1,499,401	1,569,556	120,696	8.3
- 자치단체이전(330목)	2,365,423	2,489,426	2,500,420	134,997	5.7
- 해외이전(340목)	28,332	28,054	26,473	△1,860	△6.6
- 일반출연금(350목)	280,931	311,468	343,329	62,398	22.2
- 연구개발출연금(360목)	272,526	273,741	325,522	52,995	19.4
○ 자산취득및운용	895,575	965,093	962,910	67,335	7.5
- 건설보상비(410목)	22,657	23,408	20,093	△2,564	△11.3
- 건설비(420목)	166,552	175,054	166,297	△254	△0.2
- 유형자산(430목)	166,009	168,042	183,393	17,383	10.5
- 무형자산(440목)	450	450	691	241	53.4
- 융자금(450목)	476,784	93,296	455,257	△21,528	△4.5
- 출자금(460목)	63,062	504,782	136,800	73,739	116.9
- 지분취득비(490목)	61	61	379	318	523.8
○ 상환지출(510목)	293,961	298,272	336,157	42,196	14.4
○ 예비비및기타(710목)	28,323	42,653	46,273	17,950	63.4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388.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2.9조원 (6.3%) 증가하였고, 재량지출은 34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1.8조원 (10.3%)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으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A)	제2회 추경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의무지출	365.0	364.8	388.0	22.9	6.3
(비 중)	(54.2)	(51.9)	(53.3)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1.8	10.3
(비 중)	(45.8)	(48.1)	(46.7)		

자료: 기획재정부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BTL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6년도 BTL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3,830억원(23.3%) 증가한 2조 2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625억원(325.2%) 증가한 1조 3,892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6,978억원(△56.4%) 감소한 5,40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한도액 합계의 20% 이내)은 전년 대비 183억원 (23.4%) 증가한 96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A)	2026년안(B)	증감(B-A)	증감률(B-A)/A
국가사업	3,267	13,892	10,625	325.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382	5,404	△6,978	△56.4
예비한도액	782	965	183	23.4
총한도액	16,431	20,261	3,830	23.3

자료: 기획재정부

Ⅱ . 2026년도 예산안 총평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 아래,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총지출은 총수입보다 2배 이상 높은 8.1%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6년도 총수입의 경우 전년 본예산 대비 3.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던 것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치는 예산안보다 8.4조원 높은 682.6조원입니다.

2026년도 총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바,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전년 본예산보다 141.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32.1조원 악화된 △53.8조원(GDP 대비 비율은 △0.8% → △2.0%), 관리재정수지는 35.1조원 악화된 △109.0조원(GDP 대비 비율은 △2.8% → △4.0%)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7.0조원(GDP 대비 0.3%p)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는 2.6조원(GDP 대비 0.2%p) 개선될 전망입니다.¹⁾

또한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대비 141.8조원 증가한 1,415.2조원(GDP 대비 비율은 48.1% → 51.6%)으로 전망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111.6조원(GDP 대비 2.5%p)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대해 경제성장 및 회복의 마중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래세대 부담 전가 및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최근 3년간의 총지출 증가율(2023년 5.2%, 2024년 2.8%, 2025년 3.2%)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세입경정(△10.3조원)과 총지출 확대(본예산 대비 30.0조원)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3%,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2%로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부진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재정투입을 마중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재정 지출 확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여러 핵심 사업들이 초혁신경제 및 기술주도 성장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실현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고(高)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계획되고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식의 적정성, 과거 집행실적 및 성과, 사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Ⅲ. 재정총량 검토

1. 총수입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에 대해 정부는 성장률 회복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증가한 390.2조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보면,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1.7%, 민간소비증가율 1.6% 및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엇갈리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2026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 · 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구 분	정부 (2025.9)	NABO (2025.9)	한국은행 (2025.8)	KDI (2025.8)	OECD (2025.9)	IMF (2025.10)	ADB (2025.9)
2025	0.9%	1.0%	0.9%	0.8%	1.0%	0.9%	0.8%
2026	1.7%	1.9%	1.6%	1.6%	2.2%	1.8%	1.6%

주) 각 기관 및 투자은행이 발표한 최신 전망치 기준이며, 정부전망치는 2026년도 예산안 기준임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다만,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세 수입의 전제가 되는 전망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수오차와 관련하여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정부는 지난 3년간 본예산 대비 약 △10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유념하여, 향후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국세수입은 세수 재추계 결과 369.9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본예산 382.4조원 대비 △12.5조원(△3.3%), 제2회 추가경정 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0.6%)이 부족한 수준인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를 합치면 약 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수오차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본예산 대비 오차율도 2023~2025년 각각 △14.1%, △8.4%, △3.3%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예산안(390.2조원)보다 5.9조원(1.5%) 많은 396.1조원입니다.

한편,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함에도 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조세지출 정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수혜 비중이 높아지는 등 조세지출 정책이 역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세지출 정책의 본래 취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 이후 국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 및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각각 1.5%p 초과한 15.8%, 16.1%를 기록하였고, 2025년은 법정한도를 0.5%p 초과한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의 국세감면 규모는 80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58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6.1%를 기록할 전망이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전년보다 1.0%p 증가함에 따라 법정한도는 초과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3~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 %p)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A)	2026년 전망(B)	증감 (B-A)
○ 국세감면액	697,664	705,171	764,719	805,277	40,558
○ 국세수입 총액 ¹⁾ (B)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192,597
○ 국세감면율 [A/(A+B)]	15.8	16.1	16.0	16.1	0.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²⁾	14.3	14.6	15.5	16.5	1.0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를 바탕으로 작성성

한편, 개인별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2022년 12조 5,080억원 → 2026년 18조 369억원) 및 개인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2022년 31.7% → 2026년 35.1%)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²⁾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2024년 2조 3,476억원 → 2026년 4조 7,073억원) 및 개인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2022년 9.8% → 2026년 16.5%)도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재정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외수입의 경우 올해 매각에 실패한 주식회사 NXC 물납주식 매각대 3.7조원을 다시 예산안에 계상하고, 최근 통신사·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과징금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세입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4조원(GDP의 0.5%) 이상인 기업

정부는 2023년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주)NXC 주식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나, 이 중 3.7조원에 대한 올해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2026년에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주)NXC 주식 매각 수입금을 감안하여 관련 세입 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상당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6년 과징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관련 세입 예산의 증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4년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수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개 세입 과목은 수납률이 8.8%에 불과한 바, 정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미반납금을 조속히 반납받고, 개인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이 100억원 이상이나 수납률이 50.0% 미만인 세입 과목은 21개 부처 총 48개로, 정부는 총 46조 1,319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4조 421억 1,800만원만 수납되어 수납률이 8.8%로 저조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미반납액을 조속히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력부족,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총지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 27조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종료 예정인 사업의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 성과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지출 구조조정 제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종료된 사업, 총사업비의 감액 조정 없이 연도별 예산을 차년도로 이연한 사업, 사업 간 이관 및 조정으로 실제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출 구조조정은 당해년도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자율계정 이관 대상 사업을 확대 하였는데, 일부 이관 사업은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부와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이관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과 기능 조정이 요구되거나 사업 간 유사 중복으로 인해 통합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을 편성하면서 연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 추이를 감안할 때 이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바, 적정 금리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재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6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으로 편성된 34.4조원 중 과거 확정금리에 따라 지급되는 기존 28.2조원을 제외한 신규 발행분 이자 6.2조원은 국고채 금리 전망치 3.0%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보면, 2023년 3.57%, 2024년 3.22%, 2025년 8월 기준 2.55%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3년물은 2.4%, 10년물은 2.8%입니다.

따라서 3.0%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은 다소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중장기 재정지출 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재량지출의 비중이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보면, 전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4.2%에서 2026년 53.3%로 하락한 이후 2029년 55.8%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재량지출 비중은 2025년 45.8%에서 2026년 46.7%로 증가한 후 2029년 44.2%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의무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의무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의무지출의 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부 세부사업은 내역사업의 일부만 이관되어 동일한 목적의 내역사업들이 복수의 부처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처 간 관할 중첩으로 정책 추진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관 이관이 발생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 세입사업은 총 34개, 예산액은 19조 7,436억원이며, 세출사업은 총 150개, 예산은 4조 1,466억원입니다.

다만 일부 세부사업은 내역사업의 일부만 이관됨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지닌 내역사업들이 복수의 부처에 편성되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 간 관할 중첩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추진체계가 불명확해거나, 향후 관련 예산안이 중복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재정건전성

정부는 2026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GDP 대비 $\Delta 4.0\%$ 로 전망하면서 향후 이를 $\Delta 4\%$ 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확장 재정 및 의무지출 확대 등의 여건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세입 기반 확보 및 비효율적 지출 최소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Delta 4.0\%$ 이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Delta 4\%$ 초반대로 관리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 관리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예산	제2회 추경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Delta 73.9$ ($\Delta 2.8$)	$\Delta 111.6$ ($\Delta 4.2$)	$\Delta 109.0$ ($\Delta 4.0$)	$\Delta 115.4$ ($\Delta 4.1$)	$\Delta 128.9$ ($\Delta 4.4$)	$\Delta 124.9$ ($\Delta 4.1$)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정부가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3%)이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폭넓은 세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적자성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향후 국가채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7년 34.1%에서 2026년 51.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대응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 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재정수입의 증가는 제약되는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50.5%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세입여건의 악화 및 복지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³⁾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한 1,217.3조원이며 GDP 대비 비율은

3)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 시 통용되는 지표임.

50.5%인 바, 일본(249.7%), 이탈리아(134.6%), 미국(118.7%), 프랑스(109.9%) 등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39.7%에서 2023년 50.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5%에서 2030년 64.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이어 첨단전략산업기금까지 신설됨에 따라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2025년 16.7조원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는 향후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11년 35.1조원에서 2023년 10.5조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 이후 11.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신설로 16.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2025년 16.7조원 규모에서 2029년 8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9.

이 채권들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보증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일반 재정사업과는 달리 국가재정 외 기금이므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채무로 전환되어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의 발행규모, 대출상환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주요 정책 검토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총 12가지의 핵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72조원)를 위해, AI 3강을 위한 대전환(10.1조원), 신산업·R&D 혁신(44.3조원),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4.3조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7.9조원),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5.7조원)이라는 5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75조원)를 위해, 지방거점성장(29.2조원), 저출생·고령화 대응(70.4조원), 촘촘한 사회안전매트(32.1조원), 민생·사회연대경제(26.2조원),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17.6조원)라는 5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30조원)를 위해, 재난 예측·예방·대응(5.8조원),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23.8조원)라는 2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3대 중점투자 분야 및 12가지 핵심과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72조원)

- AI 3강을 위한 대전환
- 신산업 · R&D 혁신
- 통상현안대응 · 수출 지원
- 에너지 전환 · 탄소중립
-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75조원)

- 지방거점성장
- 저출생 · 고령화 대응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 민생 · 사회연대경제
- 산재예방 · 취약노동자 보호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 · 안보
(30조원)

- 재난 예측 · 예방 · 대응
-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8.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인공지능(AI) 전환 과제

정부는 사회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고 하드웨어 및 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총 10.1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자동차·반도체 등 피지컬 AI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 측면에서는 복지·고용·납세 등 공공부문에 AI를 도입 및 확산하려고 하고, 민간 측면에서는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X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 다부처 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반조성 측면에서는 고성능 GPU 구매, 인공지능 전주기 (GPU·데이터 등) 바우처 지급,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AI 전문 인재양성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전국민 AI 확산(Boom-up)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첫째,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AX 응용제품 신속상용화지원’ 사업은 일부 부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요조사와 과제발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바이오·헬스·환경, 보안·방산, 국토·교통 분야로 구분되어 지원될 계획이나, 이는 AI 특성과 무관히 부처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므로 부처 간 중복 투자 및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처가 예산안 편성인 9~10월에 수요조사와 과제 발굴을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전사양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은 AI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임교원 확보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전사양성’ 사업은,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초빙 등의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AI 단과대학 설치 시 AI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은 모든 참여자에게 기초교육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교육참여자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신산업·R&D 혁신 과제

정부는 R&D 분야에서 첨단기술, 민간연계, 인재 및 연구기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신설 및 모태펀드 확대를 위해 총 44.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A(AI)·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등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인재 양성·해외인재 유치·우수인력 유출방지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신설 지원 예산 1조원이 편성되었으며,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신설에 따라 펀드 간 민간재원 구축(crowding 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펀드 간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및 요건 등이 면밀히 설계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신설과 동시에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예산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펀딩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나, 은행권의 투자재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펀드 간 민간재원 구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투자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와 중소기업 모태조합의 ‘Next Unicorn Project 펀드’ 간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투자단계별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는 한편, 민간으로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은 2025년 3차례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 간 이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모태펀드 중 일부 투자분야는 공공자금 출자비중이 70% 이상이므로 민간자금 출자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펀드는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방지를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모태펀드는 13개 계정의 13개 분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2개 계정의 14개 분야에서 공공자금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자금의 마중물이라는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민간자금 출자 비중이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책펀드는 각 부처에서 출자금을 교부한 후 부처 간 투자기업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 및 역할분담이 필요하나 이와 같은 절차 및 제도가 부재하므로, 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 정책분야의 투자 분야를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과제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고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기금에 1조 9,000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 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방산·조선기업에 대한 보증·출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출기반 지원을 위해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R&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30~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진행 중에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제출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바, 2025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정책 금융기관이 대미 통상 금융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기금의 대출·투자·보증 등의 재원을 지원하려는 예산안이 1조 9,00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에는 협상이 진행 중임에 따라 관련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락되었으므로 정부는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상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관련 사업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미 고관세 부과 등 특정 통상위험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미국 관세조치 대상 산업이나 수입규제 위험 품목,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요건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마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 피해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품목별 수출 의존도, 주요 수출국의 통상조치 현황, 산업별 피해예상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통상부의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과거 투자지원금 집행 실적 및 융자금 회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집행가능한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의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지원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도 예상 투자수요 및 기간 확대를 기초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5년도 투자지원금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지원 가능 금액과 투자실적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통한 융자기간 연장과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과거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과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지원 확대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감축 기반 조성 등에 총 7.9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용자·보조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등 탄소 감축 기반을 조성하고 무공해차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자립·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기존 설비 도입단가 변동 추이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ESS(Energe Storage Sytem) 도입 단가를 2016 ~ 2023년 간 연도별 도입 단가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나, 매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은 인허가 및 PF 대출 시점 예측의 어려움으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보증 지원이 없어 2025년 예산 320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CE100 프로젝트 추진’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사업 특성상 온실가스의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미포함되었는바, 대상 사업 선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CE100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CE100 (Circular Economy, 무채굴 순환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R&D)’ 사업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의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과제

정부는 K-컬처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소프트웨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총 5.7조원을 편성했습니다.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편, 순수창작자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당초 목적 달성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도의 면밀한 설계 및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당초 목적인 청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 유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티켓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권의 환급조건 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 관련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 전 과정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단발적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준비·현지활동 수행 및 관리·사후 환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을 서둘러 운영하기보다,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통합 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제휴처 확보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 지방 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 생활환경 개선 과제

정부는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지원, 지역 내 산학연 협업 강화 등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인프라 강화 등 지방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29.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권역별 전략산업 관련 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 및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광역·도시철도의 적기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첫째, 5극3특 전략은 권역별 성장거점 선정이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갈등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극3특 전략은 최근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체 구성이 속속 추진되는 등 초광역 성장거점 집중 육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권역별 성장거점이나 전략산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집행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5극3특 전략에 맞게 사업 체계를 재구조화할 경우 각 시·도 간 갈등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보완,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확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국고지원율이 40%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연간 약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바,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주민이 주민등록 이전이나 일시적 거주를 통해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및 지역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저출생·고령화 대응 과제

정부는 저출생 반등, 미래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 등을 목표로 아동수당 및 무상교육 지급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70.4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가계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 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지원 강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첫째, 저출생 반등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정책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이 매년 계획 대비 실제 충원이 부족하여 집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중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정책 수요가 많지 않으나 2026년 계획 가구가 2024년 지원 가구의 2배가 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충 전담 공무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실제 수급률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 사업은 정원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전담 공무원 대규모 채용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사전에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급여’ 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수급률이 예산편성 기준인 법정 수급률보다 저조한 측면이 있는바, 실제 수급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지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 지적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의 반복 수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 상품 부재, 현재 구직 중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 소외 등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 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한시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논의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의 반복 수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국토교통부의 ‘통합공공임대(용자·출자)’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저출생·고령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상 사업의 판단 기준과 선정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통합공공임대(용자·출자)’ 사업은 다자녀가구 등에게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 유형(영구·국민·행복)의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신혼부부·고령자 등 유형별로 사업이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 I 유형은 학생의 소득수준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하고, 국가장학금 사업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 대응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사회안전 기반 강화 과제

정부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위기가구, 청소년, 여성, 자살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총 32.1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강화,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및 고용지원 확대,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청소년·여성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살위험군에 대해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에 의해 향후 의무지출 소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급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확대등의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의무지출의 2026년도 전망치는 22조 4,665억원으로, 이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6년도 전망치 21조 8,382억원보다 6,283억원 증가(2.9%)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 확대를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의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지속가능성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긍정적인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기준과 이용 절차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경우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해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 기준과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인상을 고려한 지원대상 축소 조정 필요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층을 포함해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과제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주거·교통 지원 등 민생회복,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26.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대상 햇살론 공급,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온라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우수 협동조합 지원 강화, 마을기업 성장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햇살론과 관련하여 정부재정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 순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시 기존 제도에서 신규 제도로 이동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으로 인해 정부재정 투입이 증가하게 되나,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정액패스 제도 도입으로 기존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서 정액패스로 이동하는 가입자 수를 명확히 추계하고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비 차등 지원 시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등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시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 등급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2025년 8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 기업 중 사회적가치 평가(SVI) 우수 이상 등급 기업은 27.4% 수준에 불과해 동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영향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 시 SVI 평가 등급 요건을 설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과거 ‘청년 등 창업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실적 저조 등의 지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산업재해 예방 과제

정부는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산재예방 및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총 17.1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재예방 용자 및 안전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자체 협업 프로그램 신설 등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하여 주요 업종(건설·조선업 등) 대상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일터 안전 인식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재해조사판정’ 사업 등 일부 신규 사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법률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재해조사판정’ 사업과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법령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에 대한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의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등 일부 산재예방 사업들의 경우 각 기관과 사업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나, 고용노동부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고예방시설지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채용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 및 ‘**민간 기술지도**’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지도 및 점검이 반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재난예방·대응 과제

정부는 재해·재난에 대해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생범죄를 근절하는 것에 투자할 목적으로 총 5.8조원을 편성했습니다.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해·재난대책비를 확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확대 및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인력 충원 및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의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재해복구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부 재난안전사업의 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부처의 자료 제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 및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재해복구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 일부 사업들은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거나(경찰청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강화’ 사업 등 24개 사업),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였으므로(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사업 등 6개 사업),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이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상 ‘범죄’ 유형에 민생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민생범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안전사고’의 세부유형으로 ‘범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생범죄 중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민생범죄 대응 강화 차원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다양한 민생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위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과제

정부는 군 장병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투기·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총 22.8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병복지와 관련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 인상·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급식단가 및 동원훈련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AI·드론·로봇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첫째, 국방부의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신규 사업은 관련된 법률개정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원훈련’ 사업 등 일부 사업은 편성 기준과 실제 훈련 인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과 ‘청년간부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법률 개정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동원훈련’ 사업과 ‘일반훈련’ 사업은 실제 훈련 인원의 평균 수치에 일정한 보정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 인원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하나, 최근 2년의 실제 훈련 인원보다 더 많은 지원물량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목표 달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업 지연 방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은 센터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의 진행 및 소요군·기관에서 필요한 AI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 활용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R&D)’ 사업은 2026년 초 탐색개발 계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기술 진부화에 따른 사업효과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부처별 예산 주요 분석내용(요약)

부처명	주요 분석내용	분석건수	해당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필요	1건	I -7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실 소재지에 연계되는 사업은 청와대 복귀 후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건	I -10
국회	·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사업의 연간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4건	I -24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3건	I -45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가상자산추적도구 도입 사업은 기존 도입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구입 수량 조정 검토 필요	8건	I -72
법제처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2건	I -93
감사원	·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산장비 구입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필요	4건	I -105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사업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 처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 필요	2건	I -114
헌법재판소	· 망분리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관 특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필요	2건	I -123
대법원	·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미지급금 이월금의 일시 지급 등 급격한 지출 증가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5건	I -148

부처명	주요 분석내용	분석건수	해당 보고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PBS 폐지 및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8건	I -160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의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미지급 문제 해결 필요	15건	I -212
공정거래위원회	· 포렌식 위탁교육 후 부적정한 인력배치 및 교육 수요 부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3건	I -264
금융위원회	· 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	10건	I -310
국민권익위원회	·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의 민원전화번호 110 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콜센터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3건	I -35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과징금 부과처분을 고려한 증액 조정 검토 필요	4건	I -36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주)NXC 주식 매각대금을 고려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증액 조정 검토 필요	21건	II -29
국세청	·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 필요	4건	II -117
관세청	·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단기적 재정절감을 위한 임차방식 전환 지양 필요	4건	II -135
조달청	·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사업은 마스크 재고의 효율적 관리 필요	5건	II -157
국가데이터처	· 품질관리 사업은 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이행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4건	II -171

부처명	주요 분석내용	분석건수	해당 보고서
[교육위원회]			
교육부	·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필요	17건	Ⅱ -198
국가교육위원회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은 교육정책의 숙의·공론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1건	Ⅱ -25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GPU 활용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29건	Ⅱ -287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은 면밀한 수요검토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5건	Ⅱ -402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반회계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금 R&D의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부적정	3건	Ⅱ -420
우주항공청	·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은 고도화 R&D 지원 전 기술이전 관련 논의 필요	7건	Ⅱ -445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국별협력사업(ODA)의 집행부진 사업의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	10건	Ⅲ -23
통일부	·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7건	Ⅲ -8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은 이념적 중립성 및 세대별 대표성 확보방안 모색 필요 등	2건	Ⅲ -104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 보안관제 구축 사업은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구축 필요	3건	Ⅲ -121

부처명	주요 분석내용	분석건수	해당 보고서
[국방위원회]			
국방부	·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	15건	Ⅲ-159
병무청	·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중도해지율 등을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3건	Ⅲ-221
방위사업청	·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피료 등	17건	Ⅲ-275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3건	Ⅲ-330
경찰청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 확대에 따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도입 검토 필요 등	8건	Ⅲ-425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 운영사업은 철저한 개원 준비 및 의료인력 확보 노력 필요	4건	Ⅲ-444
인사혁신처	·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사업 등은 지자체 수탁금 잉여금 반환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등	4건	Ⅲ-4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청사 CI 제작·교체 사업은 선거연수원 CI 교체의 필요성 검토 필요	3건	Ⅲ-485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안전사회 구현 사업은 진상규명조사 결과와 연구용역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1건	Ⅲ-49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국제 역량 제고 및 K-컬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체계 마련 필요	17건	Ⅳ-35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	8건	Ⅳ-92

부처명	주요 분석내용	분석건수	해당 보고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 지원센터 사업은 전문인력 중심 운영체계 마련과 핵심시설 위주로 건립 필요	16건	Ⅳ-151
농촌진흥청	·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사업은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의 국가소유 확대 검토 등	5건	Ⅳ-198
산림청	·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사업 등은 산림경영 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7건	Ⅳ-215
해양수산부	·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13건	Ⅳ-285
해양경찰청	·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은 연내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4건	Ⅳ-3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15건	Ⅳ-366
지식재산처	·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사업은 기존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과 신규 시스템 검증 비용의 중복성 검토 필요	7건	Ⅳ-433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민간 자금의 매칭 조성 및 투자 유도 필요 등	15건	Ⅳ-520

부처명	주요 분석내용	분석건수	해당 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기관 용자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마련 필요	18건	V -85
식품의약품 안전처	· 수출허가지원 거점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7건	V -113
질병관리청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8건	V -14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은 조속히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 방지 필요	24건	V -213
기상청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은 기술이전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6건	V -305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 보완 필요	17건	V -35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공적주택 공급(분양·임대) 사업은 성과관리를 위한 주택공급 실적 집계방식 검토 필요	24건	V -44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사업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 검토 필요	5건	V -549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공정 관리 필요	3건	V -583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 서비스 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돌보미 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8건	V -602